

OCI 불법 주식거래 수사 “본격화”

금융감독원 직원 2명 소환해 조사 ... 동아일보 사장도 혐의 전면부인

검찰이 OCI의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7월24일 OCI(구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6월 말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자료를 통보받는데 이어 불법 주식거래 여부를 직접 조사한 금감원 직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수사통보 내용을 조사하는 첫 단계로 직원 2명을 소환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자료 검토와 함께 추가적으로 참고인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범위나 금감원의 수사통보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동아일보사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과 회사 간부들이 2008년 초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민주당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아들 부부 역시 2007년 말 OCI의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관계자는 “OCI는 주식투자 시점 전부터 이미 투자추천 종목이었고, 문제가 된 미공개 정보는 동아일보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매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24>